

---

## 촉근에겐 특혜 국민에겐 다이옥신,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자격도 없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최촉근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안긴 심각한 환경정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008년 3월, 경기도청에서 독일 하제사, 폐기물처리업체 M사와 함께 1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외자유치 MOU를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의 핵심 주체인 M사가 김문수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자 경기도 대변인·경기도시공사 감사까지 지낸 허송 씨가 대표로 재직했었던 기업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부지를 제공 및 행정지원을 약속하며, M사에는 향후 20년간 가축분뇨·음식물 처리비, 전기판매 수익 등 사실상 독점적 이권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M사는 폐기물 처리 외 사업 경험이 없던 기업이었으며, 불과 1년 전인 2007년 6월 경기도가 독일 엔비오사와 동일한 사업에 대해 이미 MOU를 체결해 포천시에서 시범운영까지 준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계획을 번복하고 최촉근 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몰아준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M사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을 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M사는 병원 적출물 및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1급 중점관리 사업장이었으며,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최대 10배까지 초과 배출한 사례가 무려 네 차례나 있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적으로 축적 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런데도 김문수 후보 휘하의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위반 사실을 은폐한 자료를 제출했다가 도의원들의 추궁 끝에 뒤늦게 시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청의 단속 자료 27건마저 처음에는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숨기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닙니다. 도민의 건강과 환경은 안중에도 없이, 최촉근의 이권 사업을 위해 경기도 행정을 사유화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 식 리더십의 실체입니다. 촉근에겐 이권을, 도민에겐 독금물을 안긴 역사상 최악의 환경책임자가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때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를 허용하여 어민의 생계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 사례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람을 챙긴 정치인은 공직자 자격도 없고 대통령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에겐 독가스를, 측근에겐 특혜를 안긴 김문수 후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2025년 5월 27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